

教育대개혁有感

俞 八 武

(翰林大 社會學科)

새로 등장한 改革政府 때문인지 어쩐지,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教育改革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드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달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개 단체는 '교육개혁연대회의'를 결성하고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교육정책입안의 산실 가운데 하나인 한국교육개발원도 '신한국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다. 신문에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를 둘러싼 보도와 논란이 한창이고, 전교조의 역할을 대신하여 교사들의 권익옹호 등을 자임하며 발족했던 한국교총은 교육바로세우기 운동 등으로 각지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교육계의 촉각은 정부가 '教育改革委員會'를 어떤 인물들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어떤 改革方向을 설정하여 활동해 나갈 것인가에 쏠려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사회의 교육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느낌이다. 옛날의 국경교과서 뇌물사건 등등을 비롯한 文敎部 官僚들의 비리에서부터 私學財團의 비리, 조금씩 더 내려가면 敎授採用을 둘러싼 잡음과 비리, 예체능계 과외교수의 입시부정과 횡재, 관행화된 학위관련 '기여금제도' (?)나 향응, 한참 더 내려가면 내자식만 잘되라는 월 수십만 원짜리의 유아과외 등.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 그리고 大學敎育은 발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것 중 한 가지는 정부가 개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과연 교육과 관련된 改革意志라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全敎組 해직교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敎總을 통해 교육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하는 방식 등은 사실 옛날의 정부가 해왔던 문제해결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정부의 어떤 '密室'에서는 敎育大改革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되는 것은 정부가 혹 교육개혁이라는 과제를 벌써부터 '政權維持'에 연연하여 미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보수기득권세력을 회유하고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길은 개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정과정 등을 거치면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누구는 봐 주고 부정부패는 잠시동안만 이슈로 삼는 등의 방식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의 全敎組 복직문제를 둘러싸고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솔직히 全敎組 교사들은 오늘날 교육계인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강렬하게 요구하는 敎育改革을 앞장서 요구했고 실천에 옮기려 했던 사람들이다. 갖은 고초와 희생을 무릅쓰고 '참교육' 운동을 벌여온 全敎組 교사들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명분으로 탄압받고, 全敎組를 탈퇴하고 '소양교육'을 받아야만 복직시킨다는 조치는

정부의 改革意志를 의심케 만들기에 충분한 조치의 하나이다. 교사들이 왜 스스로를 노동자와 동일시 또는 '비천시' (?)하게 되었는가. 정부나 사회의 일각에서 보아왔듯이 어떤 불온사상 때문이었을까. 더 큰 요인은 教育을 제대로 하자라는 것이었다. 教育이 정부의 정권유지도구로 전락했던 현실, 人間教育이 무시된 입시위주의 암기식교육, 기업체 근로자들보다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 학교행정에 있어서의 權威主義와 부조리 등 全敎組 교사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오늘날 정부가 해결해야 할 教育大改革의 과제 바로 그것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全敎組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는 大學入試制度의 改編이었다. 올봄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일련의 대학입시부정사건이 그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入試制度의 改編은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지만,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다.

사실 大學入試制度는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축을 형성해 왔고, 중·고등학교 교육은 말할 나위도 없고 심지어 유아교육에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국민학교 취학전부터 大學入試를 겨냥하여 자녀들의 教育目標를 설정하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 학원에 보내는 기막힌 教育現狀. 우리 지식 좋은 자리에 앉혀 달라고 돈봉투 건네주는 수많은 국민학교 어머니회 어머니들. 우리 지식 좋은 대학 가라고 러시아워의 교통전쟁 속에 승용차로 줄서는 명문고등학교 입구의 앞서가는 입시전쟁.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의 大學入試制度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大學入試制度 改編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으며, 파감한 教育改革을 요구하는 상황들은 이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다.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관심도 없는 專攻學科를 지망해 4년 세월을 보내는가 하면, 교수들과 시간강사들은 초과강의와 대형강의에 시달린다. 私立大學 財團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빚을 내거나 등록금을 올리고, 비리도 저지른다. 바둑배기를 하느라 언제나 분비는 서울 어느 名門大學의 교수계실. 비전공자이지만 모교 출신이라 新任敎授로 採用하여 분규가 일고 있는 서울지역의 어느 모범대학. 같은 학교교수들끼리 서로 자기 '똥마니'를 고집, 수년동안 부족한 전임교원을 한 명도 보충하지 못한다는 부산지역의 모대학. 總長直選問題를 둘러싼 再任用脫落, 해직, 농성, 시위로 아수라장이 된 대구지역의 모대학.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위 改革政府라는 정부는 벌써부터 改革보다는 政權維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러나 教育은 우리 사회에서 軍閥文化와 맞물려 굴러가던 '韓國病'의 또다른 한 축을 이루어 왔다는 점을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육개혁 없는 '건강한 한국사회 건설'이란 幻像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教育改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教育公概念'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민주화, 즉 '教育民主化'가 추진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각종의 학내분규는 사실상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教育은 대학에 이르기까지 國家가 財政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은 私學財團이 보충적으로 맡아서 하되,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 압박을 국가재정이 다시 보충해야 한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올리든지, 국방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어차피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教育問題를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의사를 따라 민주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民主主義 原則은 재정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 이외에도 대학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여론에 귀를 많이 기울인다는 新政府. 어디 이번에도 教育界 輿論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한번 주목해 볼 일이다. ■